

| European Commission 보고서 요약 |

'17년 EU의 양성 평등에 관한 보고서

손옥이 전문위원

이 글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(EU)에서 2017년 3월에 발간한 'Repor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the EU' 보고서를 번역, 요약한 글입니다.

1.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가와 동등한 경제적 독립성

■ 남녀 고용률은 증가, 핵심생산인구 성별격차는 정체

- '16년 3/4분기에 남성 고용률은 77.4%, 여성 고용률은 65.5%로 경기침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
- 남녀 고용성별격차는 '10~'13년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정체
 - * 특히 50~64세의 고용상 성별격차가 감소, 이는 연금시스템의 변화와 청년고용의 정체에 기인

■ '긱 이코노미(gig economy)'로의 전환

- 실업률은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함
 - * '16년 3/4분기 실업자수는 남성이 10.5백만, 여성이 9.6백만
- 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보다 높음
 - * 그리스: 27.2%(여성) vs 18.9%(남성), 스페인: 20.7%(여성) vs 17.4%(남성), 이탈리아: 12%(여성) vs 10.2%(남성)
- 일의 형태는 제로 아워(zero hour)계약이나 단기 계약 등과 같은 '긱 이코노미'로 전환 추세

- 여성 근로자들이 비고정적인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(여성 14.1% : 남성 12.9%)

■ 무급 근로에서 여성의 부담

- 유급 근로와 무급 근로에 기여하는 남녀 간 근로시간의 격차는 큼
 - EU평균 주당 유급 근로시간은 남성 39시간, 여성 33시간이며 무급 근로시간은 남성 10시간미만, 여성 22시간
- 남녀 간 일의 종류도 상이, 여성은 반복적이고 노동 집약적이며, 급격한 변화나 동시에 처리해야하는 일을 주로 맡는 편

■ 일·생활 균형(work-life balance)정책

- 남녀에게 동등한 가사분담을 하게 하는 일·생활 균형정책은 경제적 독립성과 ‘웰빙(well-being)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
- 핀란드는 직장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요인 제거와 남성우위 직장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과제 이행
- 호주는 '17년 ‘Family Time Bonus Act’를 이행, 남녀 양육 동등 분담을 목표,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매달 440~1030유로를 지급
- 독일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34%로 평균 3.1개월이며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

■ 제3국 이주민과의 통합

- '16년 유럽 28개국의 망명신청자 수는 백만 명 이상이며 이중 33%는 여성, 현 추세에서 제3국 국민들과의 통합은 중요
- 여성 이주자의 고용률은 46.4%로 노동시장 접근의 장벽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유 기술과 창의성 활용 미흡

- 위원회는 '16년 제3국 국민과의 통합에 대한 실행계획 제안, 'Advisory 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'을 통해 의견 발표

2. 성별임금·연금 격차 감소를 통한 여성 빈곤 해결

■ EU의 성별임금격차

- 여성은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경력 단절로 인하여 남성보다 급여 및 연금이 낮은 편
- 성별고용격차는 감소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히 정체
 - * 원인으로 여성은 1)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직업군에 종사, 2)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파트타임이나 임시계약직에 종사, 3) 남성은 장기근무에 대한 급여보상을 받음

■ EU와 회원국들의 성별임금격차 감소를 위한 노력

- EU조약(Treaties)과 지침서(Directives)에는 고용과 직업에서의 양성평등을 포함하고 있으나, 동등한 임금지급에 대한 효과적인 적용은 과제(유럽연합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이행)
- '14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급여지급 투명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안 채택, '16년 회원국들은 권고안 도입
- '16년 회원국들의 경험공유 및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
- '16년 기술과 자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'New Skill Agenda' 도입
- '16년 11월 3일을 'European Equal Pay Day'로 지정, 성별임금격차 관련 자료 배포
- '16년 11월 노동시장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, 성별임금격차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주제로 사회적 파트너와의 대화 마련

- 회원국들은 최저임금, 공공부문임금 설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

* 여성은 저임금부분, 공공부문, 교섭이 제한된 직업에 집중

■ 기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성별격차

- 성별격차는 조기에 시작
 - 15세 학생 대상 수학평가에서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두각을 나타냄
 - 15세 학생 대상 과학평가에서 유럽 10개국(벨기에, 독일, 아일랜드, 스페인, 호주 등)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성적, 8개국(그리스, 불가리아, 핀란드 등)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성적 기록
- 성별이 직업선택에도 영향
 - PISA조사에서는 15세 남학생들은 ICT전문가, 과학자, 엔지니어를 장래희망으로 생각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의사, 수의사, 간호사를 희망
- '16년 위원회는 교육 분야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사회경제 격차를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
- '17년 'Skills Guarantee' 도입, 성인에게 최소한의 기술 습득 기회 제공

■ 빈곤해결

- 여전히 남성의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여성의 소득에 의존하는 가구도 증가 추세
- 조사 결과에 따르면,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70%가 빈곤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
- 편부모 가정이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에 노출될 가능성은 약 47.7%

3.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

■ 기업간부에서의 성비

- 의사결정과정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는 기본권 존중과 정의의 문제이며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방안
- '1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, 대기업 간부 4명중 1명은 여성이며 대기업 간부의 30%가 여성인 국가는 4개국(프랑스, 이태리, 핀란드, 스웨덴)임
 - * 여성 CEO비율은 5.7%, 간부 중 여성위원장은 7.7%
- 유럽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부족이 문제로 대두
 - 다각적인 접근(정책, 대안적용, 법 시행, 자금 지원)방안을 통해 성비균형에 기여

■ 금융기관과 의회·정부·정계에서의 성비

- EU 주요 금융기관과 회원국 금융권의 대부분은 남성이 경영
- 의회와 정부 및 정계에서도 여성의 대표성은 저조
 - * 의회: 32.1%, 정부: 27.9%, 정계: 18.8%
- 지방입법기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5.3%(프랑스가 40%로 프랑스를 제외할 경우 29%)

■ 정치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지원

-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성별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
 - 1) 정치 아젠다에 양성평등과 남녀 모두 동등한 정치적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
 - 2)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할당제가 효율적인 방법이나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이행과 설계가 필요
 - * 선거시스템과 결부, 여성단체의 압박, 미디어 활동 등이 성공의 요소가 될 수 있음

- 3) 법제화 등과 같은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
- 4) 질적 및 양적 개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축적이 중요

4. 성관련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

■ 성관련 폭력에 대한 더 나은 이해

- '08~'14년 국제 살인, 폭행, 강도 발생 수는 감소한 반면, 동기간 강간, 성폭력, 성폭행은 현저히 증가
- 조사 응답자의 1/4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알고 있다고 주장, 71%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원 기관에 알림
- 응답자의 22%는 여성이 학대나 강간에 대한 주장을 만들어 내거나 과장한다는 것에 동의하였고, 17%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피해자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에 동의
- 국가별로 상이하나 동유럽에서는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가 일반적

■ 예방보호지원

- '16년 '국제여성폭력 추방의 날'을 맞이하여 위원회는 성적불평등 완화와 여성 및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조치 도입
 - * 모든 회원국, 이해 관계자,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여성 폭력 근절
- '16년 위원회는 피해자 권리 관련 EU의 법률 모니터링, 이행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위반 소송절차에 착수
- 위원회는 특정 형태의 폭력에 초점을 맞춘 과제를 시작,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폭력의 성공적인 대처방안 연구
 - 'Strengthening psychosocial methods and practices':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심리사

회적 방법을 통한 회복지원

- 'Family Justice Centres': 가정폭력피해자와 자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안식처 제공
 - 'Universities Support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': 교수들에게 대학 성폭력 정책과 관련 훈련 성공사례 연구개발
 - 'CARVE': 사내에서 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방지
 - 'Change Plus':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성관련 교육을 옹호하도록 독려
 - 'Building a Safety Net for Migrant and Refugee Women': 성폭력 경험 이민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 및 권리정보 제공
 - 'Empowering Care': 14~18세 소녀들의 개인역량 강화와 폭력으로부터 보호
- 위원회는 이민 여성 및 소녀의 인권침해, 성폭력, 성차별과 여성 밀매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

5. 전 세계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도모

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UN 2030 Agenda를 통한 양성평등

- 양성평등, 여성 및 소녀의 권리 보호는 EU의 중점 가치로 모든 EU정책과 프로그램, 유럽의 **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달문(Communication on the next steps for a sustainable European Future)***에도 반영

*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2030 아젠다 이행을 위한 위원회의 정치적 우선순위와 EU의 미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(SDGs) 달성방안 등 내용 포함

- 여성의 지위와 역량강화를 지속가능 개발과 연계한 제60차 UN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시 2030 아젠다 이행 관련 양성평등에 대한 제언

■ EU Gender Action Plan(2016-2020)

- EU Gender Action Plan 이행 점검을 위한 각국의 경험 공유 및 토론을 위한 회의 개최
- '16년 EU는 총 84개의 성폭력관련 인도적 과제를 지원(18백만 유로), 시리아, 터키, 콩고,

남수단 등 3.4백만 명이 수혜자

- ILO 협약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과 고용 및 직업차별 철폐 이행, 성별임금격차 감소에 기여

6. 모든 주체들과 협력을 통한 양성평등

■ 유럽양성평등기구(EIGE)가 제공한 실제적 도구

- Gender Equality in Academia and Research를 통해 양성평등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실제적인 정보 및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공
- Gender Impact Assessment를 통해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정책 검토 및 시정 제안
- Institutional Transformation을 통해 조직 내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로 문화 확립
- Gender Equality Training을 통해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도구 마련 및 직원들의 지식 함양

■ 양성평등 관련 3가지 중점과제

- 연구 및 혁신 분야의 기관적인 변화를 통해 양성평등 추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EU는 다음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
 - 과학 분야 경력에서 평등 촉진
 - 의사결정과정과 기관에서의 성비 보장
 - 연구 및 혁신 관련 콘텐츠에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·사회적 특징을 고려한 양성 통합적인 관점제시

■ 기금을 통한 양성평등추진노력

- 유럽사회기금(ESF)을 통해 양성 모두 평등한 고용, 직업개발,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우선순위로 '14년~'20년 동안 16억 유로 지원

- 유럽투자은행(EIB)은 은행의 정책 및 운영목표에 양성평등을 포함, 여성에 대한 취업·자금 지원, 여성 창업 등을 지원

7. 결론

- 현 추세가 지속되면 한 세기가 지나도 소득에서의 성별격차는 줄어들기 힘들 것으로 예상
- 21세기에는 경제 독립성과 장기 경력, 소득 및 연금의 효과로 인하여 여성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
- 일부 유럽 국가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새로운 일·생활 균형에 대한 재정의 필요
- 경제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기술, 장기, 열정이 필요하나 여전히 여성 또는 남성이 지배하는 분야가 존재
 - * 남성은 보건, 교육 분야를 덜 선호, 여성은 과학, 수학, ICT, 엔지니어링 분야 덜 선호
- 여성이 고위임원진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과 경영과 과학 분야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은 의미
- 이미 소수 국가에서는 의사결정에서의 성비가 균형에 가까우므로 의사결정에서의 평등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
- 지속적인 각성이 적극적인 정책과 결합될 때 양성평등이 가능할 것